

한국의 사회변동과 범죄 추세, 1966-2007

박성훈 · 장안식 · 이재경

이 연구는 범죄율의 변화가 사회의 변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시작되었다. 논자에 따라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1980년 이후의 중요한 변동의 시기는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범죄발생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범죄통제 요인과 경제관련 요인, 그리고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변동을 연결 지어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범죄유형에 따라 조건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죄를 재산범죄와 강력범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출된 관련 변인들을 조작화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첫째로 범죄유형별로 요인들의 영향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재산범죄의 경우 경제적 규모가 커지고, 국가권력이 보다 민주적이고 덜 독재적일수록, 실업률 및 소득불평등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증가할수록 재산범죄율은 증가하였다. 반면,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오직 실업률만이 강력범죄율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둘째로 재산범죄율과 강력범죄율의 변화 양상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시점의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87년과 1997년이라는 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범죄율과 강력범죄율의 추세를 분석했을 때, 오직 1997년 이후의 시기에만 재산범죄율이 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시적 사회변동과 범죄현상이 특정한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기 보다는 누적적이고 산재해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러한 사회구조적 요인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도 범죄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주제어 : 재산범죄, 강력범죄, 사회변동, 경제 불평등, 시계열 분석

박성훈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연구원(사회학). ngokr@naver.com(교신저자)

장안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사회학). chas74@naver.com

이재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사회학). jhez0930@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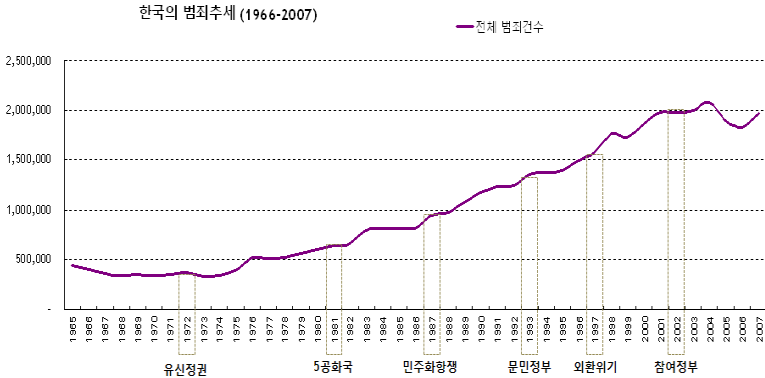
1. 서론

한국은 압축적 근대화로 일컬어지는 근대화 과정 속에서 단기간에 수많은 변동의 과정을 겪어왔다. 1960년대에 시작된 경제 성장의 화두 속에서 나타난 권위주의적인 억압과 80년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표출, 1997년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변동까지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나타났다.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공존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한국사회를 관통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는 보다 더 큰 사회변동의 잠재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논자들은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중요 사회변동으로 1987년의 민주화 운동과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지적해 왔다. 우선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시점은 한국사회가 개발독재의 시대에서 민주화의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87년은 한국사회에서 그 동안 억압되어 있던 많은 개별 이익과 자유에 대한 열망이 표출되고 확산되는 데 기여하였다(구도완, 1996; 조대엽, 2007).

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또 다른 중요한 시점은 바로 1997년의 외환 위기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사회의 변화 과정은 ‘복잡전환의 갈등’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쳤다(박길성, 2007). 특히 외환위기 이후 사회의 신뢰구조가 크게 약화되었는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보다 학연이나 지연 등의 개인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보다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직의 공포, 구직의 어려움, 암울한 미래의 전망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사회적 관계보다 학연, 혈연 지연 등을 중시하게 된 것이다(박길성, 2003; 유흥준, 2000). 이처럼 1997년 이후 경제 위기에서 파생된 사회적 변화는 부정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양극화는 곧 문화적 양극화, 건강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계경제의 붕괴는 이혼율 증가, 자살률 증가, 아동이나 노인의 보호시설 수용 증가 등 가족의 해체 과정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위기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범죄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건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범죄통계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하는 범죄 추세의 경향과 중요한 정치·경제적 변동의 시기와 범죄발생 현상간의 관계에 대한 개연성이다.



<그림 1> 한국의 전체 범죄발생 추세, 1966-2007 (자료: 대검찰청)

그동안 범죄 발생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범죄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미시적 접근방법과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미시적 이론에서는 주로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적 요인들(예를 들면, 친구관계나 사회적 유대 등)에 관심을 갖는 반면, 거시적 이론에서는 사회구조적 요인(예를 들면, 사회해체현상이나 아노미, 실업 등)에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학자들 간의 인식론적 차이,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후자의 입장에서 범죄현상을 설명하려는 연구는 전자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범죄현상에 대한 접근방식을 이렇게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해 볼 때, 이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범죄의 발생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해온 한국사회를 범죄 현상을 통해서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러나

범죄자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 분석에서 벗어나 범죄 현상을 하나의 사회적 지표로 간주하고 거시적인 이해를 시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범죄사회학 분야에서 사회변동과 관련지어 논의되어 왔던 범죄통제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범죄율의 증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범죄율이 앞서 지적한 한국사회의 두 변화 시점, 즉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위기라고 하는 사회변동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거시적 사회변동이 범죄의 발생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변동을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이론적 논의

한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현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의 발생 원인을 거시적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은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먼저 산업화, 경제발전, 경기변동, 실업률, 불평등, 빈곤 등 경제적 요인에 주목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의 경제구조와 범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 다른 접근은 범죄를 자본주의의 산물로서 여기는 맑스주의 범죄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시도는 정치구조의 형태, 정치구조의 변동 및 안정 시기, 정치적 권력이 강력한 시기와 부패한 시기 등의 요인들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관계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세 번째 접근은 생태학적 요인과 범죄와의 관계성에 주목한 것인데, 이러한 시도는 도시화나 인구의 변동 등의 변수 등을 통해 범죄와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방식은 뒤르켐(E. Durkheim)이 주장한 사회적 연대와 범죄와의 관계를 밝히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뒤르켐은 산업화 과정의 분업이 사회적 유대를 변화시키며, 이러한 변동을 통해서 무규범 상태인 ‘아노미’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는 범죄 등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최인섭, 2002).

1) 정치적 변동과 범죄

가. 범죄통제이론

범죄를 설명하는 데 통제이론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현실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졌고,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개인에게 부여된 범죄 억제력, 즉 ‘통제력’(control)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입장은 범죄학에서 고전주의 이론과 뒤르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뒤르켐은 무한한 인간의 욕망이라는 범죄-충동적 힘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테 사회적 규제라는 통제력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이것이 범죄발생의 차이로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고전주의 범죄학 역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합리적 쾌락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쾌락과 고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법을 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가정하고 있다. 이처럼 통제이론가들은 만일 사람들이 법이나 규범을 위반하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법이나 규범을 위반할 것이라고 가정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범죄를 억제하는 힘, 즉 사회통제가 무너지면 범죄나 일탈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Cullen and Agnew, 1999; Vold et al., 2002; Akers, 2004).

사실 통제이론은 주로 개인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통제이론의 시각을 거시적 맥락에 적용할 경우 국가권력의 성격과 공식 처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확장시킬 수 있다(김준호, 1986; 윤옥경, 2007). 뒤르켐은 “형벌의 진화에 대한 두 가지 법칙”(1973)이라는 논문에서 처벌의 강도는 덜 발달된 사회-전근대사회일수록, 보다 친밀하고 원시적인 사회일수록 더 강할 것이라고 하면서 중앙집권적 국가는 절대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달리 말하면 규범의 단일성이 높은 사회, 즉 집합의식이 높은 사회에서는 처벌의 강도가 높다는 것이다. 처벌의 양적인 면을 지적한 첫 번째 법칙과 달리 두 번째 법칙에서는 자유의 박탈이 사회통제의 표준적인 수단이 될 것이고, 이것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하였다. 뒤르켐은 “만약

오늘날의 형벌이 과거에 비해서 덜 엄격하다면 이것은 과거의 형벌제도가 엄격함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다른 제도에 의해서 대체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1973: 306). 즉 국가의 권력이 권위적이고 중앙집권화 될수록 형벌이나 범죄통제가 보다 엄격해지는 반면, 국가의 권력이 보다 민주적일수록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보다 관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자를 처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 프랑코(Franco) 권위주의 통치 시기 전후로 범죄자 처벌에 대한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적 지배 하에서 처벌은 보다 엄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위주의적 정부였던 프랑코 지배 이후 형사사법체제, 행형규범, 사면 등은 형벌체계가 더욱 억압적이었던 점을 보여주었다(Barberet, 1994; 윤옥경, 2007).

사회통제를 정치적 접근으로 이해하는 다수의 이론가들은 현존하는 사회질서는 부분적으로 사회 불평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잠재적인 정치적 분할(political division)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의 학자들은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현존하는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경제적 하층의 요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접근에 따르면 범죄의 통제는 근본적으로 내재적이면서 정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이콥스와 헬름스(Jacobs and Helms, 1996)는 범죄통제가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범죄통제의 정치적 맥락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1964년 이래로 새로운 정부는 보수적이든 민주적이든 이듬해의 구금율을 높이는 정책들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유층과 하위층 사이의 경제적 차이의 변동은 교도소 수감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통제(예를 들면, 구금율) 정책은 국가가 경제적 균열로 인해 생겨난 잠재적인 정치적 갈등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샤인골드(Sheingold, 1995)는 정치권력자들이 엄벌주의 형사정책과 형벌정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범죄문제와 형사정책 그 자체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중

의 저항과 분노를 길거리 범죄(street crimes)의 문제로 돌림으로써 자신들의 정책적 실패를 무마하고, 여론의 관심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범죄와 형사정책을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윤옥경, 2007: 319).

나. 1987년 민주화

1987년의 민주화 운동은 한국사회의 변동과 범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위에서 언급한 범죄의 통제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비록 1987년의 민주화가 진정한 변동이었던가의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라고 여겨진다. 흔히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의 시기는 '87년 체제'라고 명명되고 있다(김호기, 2007; 박상훈, 2006; 윤상철, 2005). 이 시기는 민주화로 이행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이전에 억압되었던 많은 개별 이익과 개인의 자유의지가 급격히 표출되고 확산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1987년 민주화는 사회의 체제 전환을 막고 제도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시민사회의 집단적 동원력을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로 인해 노동, 교육, 환경, 여성, 통일 등 수많은 갈등이 1987년 이후 본격적으로 분출되었다. 이것은 군부 권위주의 하에서 억압되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갈등이 분출되고 사회균열이 다원화되면서 자본 대 노동, 환경 대 개발, 남성 대 여성, 기성세대 대 신세대 간의 긴장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폭발해 온 것으로 설명된다(구도완, 1996; 조대엽, 2007; 채만수, 2007).

다른 한편으로 범죄학적 시각에서 보면 1987년 민주화는 다른 사회적 욕구와 마찬가지로 범죄 역시 강력하게 억압되고 통제되던 권위주의 시기에서 범죄에 대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지는 시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뒤르켐이 오늘날의 처벌이 예전에 비해서 덜 엄격하다면, 이것은 예전의 형벌제도가 엄격함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다른 제도에 의해서 대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듯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변동이 범죄와 범죄통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선형 연구에서는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등 권위주의적 군부독재 하에서 정치범과 같은 특별법 위반자는 늘어난 반면, 범죄율 자체는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Yoon and Joo, 2005), 이러한 결과는 권위주의적 정부 하에서 범죄 역시 다른 사회적 욕구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강하게 통제되고 억압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1) 경제적 위기와 범죄

가. 경제적 불평등과 아노미

범죄를 설명하는 또 다른 거시적 측면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고려할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과 범죄 간의 인과적 관계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Messner, 1982; Williams, 1984; Cantor and Land, 1985; Devine, Sheley and Smith, 1988; Fowles and Merva, 1996).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범죄행위의 증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경제적 불평등의 요소는 일종의 범죄 동기 혹은 범죄 기회의 기제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불황일 때 범죄의 동기는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증폭된 스트레스와 합법적인 경제수단이 부족한 상황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경제적 욕구 및 필요에 대한 합법적 기회의 박탈과 실업, 그리고 피폐된 생활의 결과로서 범죄 행위를 설명한다.

예를 들면, 1964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에 관한 연구(Yoon and Joo, 1995)에서는 실업률이 높을수록 범죄율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946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Cantor and Land, 1985)에서는 전년도 실업률(범죄의 동기적 측면)은 다음해 재산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해년도의 실업률(범죄의 기회적 측면)은 당해년도의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에 오히려 부정적으로(negatively)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Devine et al., 1988)에서는 범죄율 변화에 거시경제적 변수뿐만 아니라 범죄통제 정책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분석 결과 실

업률과 인플레이션은 범죄율과 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 수감율과 보조금과 같은 범죄통제 정책은 범죄율과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헨과 펠슨(Cohen and Felson, 1979)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에 따르면, 실업은 범죄의 동기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을 양산하기도 하지만, 불경기로 인해 범죄의 대상 또한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실업으로 인한 범죄 기회의 감소는 체계활동효과(system activity effect)와 감시효과(guardianship effect)로 요약된다. 즉, 체계활동의 감소(생산과 소비활동의 감소, 재화와 용역순환의 감소 등)와 감시의 증가(가정과 같은 일차집단 활동의 증가 등)를 통해서 높은 실업은 재산범죄를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코헨과 펠슨은 이러한 접근을 통해 미국의 실업률과 범죄율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실업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범죄의 감소효과를 나타낸 반면, 장기적으로는 범죄의 증가효과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파울스와 머바(Fowles and Merva, 1996)는 경제적 불평등과 범죄 행위의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첫 번째 가설은 임금 등의 경제적 여건을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재산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인지 여부가 분노로 이어지고, 결국 분노는 폭력적인 일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설이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아노미와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¹⁾ 한국은 근대화와 산업화를 통한 급속한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전통적 규범이 새로운 규범으로 대체되거나 통합되지 못한 이중구조 상태에서 사회적인 아노미 상태를 경험하였다(윤정구·석현호·이재혁, 2004; Hilbert, 1986). 또한 전통적 권위주의와 현대의 탈권위주의 간의 대립과 근대화를 경험하면서 자신만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이기적 개인주의로

1) 아노미는 전통적 규범과 현대적 규범 간에 힘의 무중력 상태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규범적 체계의 갑작스러운 혼란이나 일생 동안 그것에 맞추어 살아왔던 가치들의 붕괴 혹은 사회 구성원들이 갈망하는 목적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능력 사이의 갈등”(Nisbet, 1965: 46)을 의미한다.

아노미 현상이 가중되었다. 다시 말해 물질적 성공과 도덕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려는 전통적 규범이 근대화를 거쳐 현대로 넘어올수록 양극단으로 치닫게 되어 균형을 잃어버리고 아노미 상태로 빠져 들었다고 볼 수 있다(임희섭, 1997).

머튼(R. Merton)은 이러한 아노미 개념을 발전시켜 범죄학적 아노미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아노미가 사회 질서 내에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이 괴리되어 있을 때 발생한다고 설명한다.²⁾ 즉,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수준을 충족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며, 모든 사회집단에 공평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Merton, 1938: 672). 그러므로 사람들이 문화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을 사용하기 어려울수록 비합법적 수단, 즉 일탈이나 범죄를 통해 그러한 목표 달성을 취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경제적 위기나 급격한 사회변동의 시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나. 1997년 IMF 외환위기

한국사회의 변동과 관련해 경제적 불평등 및 아노미적 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시기는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사회의 변화 과정은 ‘복잡전환의 갈등’(박길성, 2003)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사회는 공적/사회적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강한 사적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성과 폐쇄성이 증가한 사회로 정의되기도 한다. 김문조(2008) 역시 소위 ‘97년 체제’가 경제적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온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97년 체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했으며,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혼란이나 대량 실업, 기존 가치관의

2) 이러한 상황을 머튼은 아노미로 규정하고 사회적 기회구조에 접근하기 어려운 개인이나 집단은 아노미 상황에서 사람들이 내면화한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수용여부에 따라 순응(conformity), 혁신(innovation), 의례(ritualism), 도피(retreatism), 그리고 반역(rebellion)의 다섯 가지 각기 다른 적응방식을 보인다고 주장한다(Merton, 1938: 676).

붕괴,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능력 사이의 갈등은 머튼이 언급하였던 아노미적 상황의 출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니계수나 오분위 배율 지수 등이 외환위기 직후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경제적 변동과 더불어 사회적 변동 역시 빠르게 전개되었다. 외환위기는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왔던 사회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줌으로써 사회 신뢰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다(정운찬, 2008).

이처럼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한국사회의 모습은 물질적 삶의 붕괴로 인한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구조의 악화, 공동체의 붕괴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경제적 변화로부터 파생된 사회적 변화는 부정적 모습으로 전개되었으며, 구성원들 간의 신뢰의 붕괴, 가족의 해체 등 미시적 차원에서 비롯되어 사회경제적 위기라고 하는 거시적 차원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기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범죄의 발생이다.

따라서 범죄율이 앞서 지적한 중요한 한국사회의 두 시점, 즉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위기라고 하는 사회변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하듯이 사회변동으로 인해 범죄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변인의 구성

가. 독립변인

독립변인은 크게 범죄통제와 관련한 요인과 경제관련 요인 등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범죄통제 요인으로는 '탈권위 지수'와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를 사용하였다. '탈권위 지수'는 1997년에 설립된 CSP(The Center for Systemic Peace)에서 수집한 자료로 전 세계 약 200여 나라를 대상으로 1800년부터 2007년까지 각 나라의 독재적 정권

(autocratic authority)과 민주적 정권(democratic authority)의 척도를 측정할 자료인데, 이 두 가지 척도를 합한 점수를 '탈권위 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³⁾

또 다른 범죄통계 요인으로서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는 『경찰백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하지만 1990년 이전의 자료는 5년 단위로 측정이 되어서 일부 연도에서 결측치(missing value)가 발생하였는데, 이처럼 자료의 형태가 연도별로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경우 다항식에 의한 보간법(polynomial interpolation)을 적용한 보정 결측치를 사용하였다.⁴⁾

경제관련 요인으로는 '실업률'과 '지니계수'를 사용하였다. '실업률'과 관련한 자료는 통계청 사이트 내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주제 찾기' 형식으로 찾을 수 있다. 지니계수 역시 통계청 자료를 통해 구할 수 있었는데, 1995년 이전의 자료는 5년 단위로 측정이 되어서 일부 연도에서 결측치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보간법을 적용하여 보정 결측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위기라는 사회변동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시기구분에 의한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사용하였다. 즉 1966년부터 1986년까지를 기준변수(reference variable)로 삼아 '1987년부터 1997년까지'와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에 따라

3) 한 나라의 민주적 정도의 측정과 관련하여 논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지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비교 연구에 공통된 지표가 없으면 국가 간 비교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표의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가 비록 국가비교 연구는 아니지만 정권의 독재적 혹은 민주적 성격을 조작화하거나 측정할만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지표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CSP자료에는 민주주의 점수(democracy score)와 독재주의 점수(autocracy score)가 있으며, 두 점수를 합친 종합점수(combined polity score)가 제시되어 있다. 종합점수의 범위는 최저 -9점에서 최고 +8점까지이며, 이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9점을 1점으로 +8점을 18점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탈권위지수의 범위는 1점부터 18점까지라고 할 수 있다.

4) 예를 들어, 중간년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균변화율(기하평균)을 통해 보정하기도 하고, 기준 년도부터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세 기간의 평균변화율(산술평균)로 보정하는 방법이 있다. 지니계수의 경우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하였다.

범죄율의 증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⁵⁾

통제변인으로는 ‘국내총소득’(GDP) 지표를 사용하였다. ‘국내총소득’은 전반적인 사회규모의 크기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인을 통제한 후에 각 독립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⁶⁾

<표 1>은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실업률’은 지니계수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실업률이 높을수록 경제적 불평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탈권위 지수’의 경우 ‘실업률’과는 상관관계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지니계수’와는 상당한 부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정권이 덜 독재적이면서 민주적인 시기일수록 경제적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의 경우에는 ‘실업률’ 및 ‘지니계수’와 같은 경제적 요인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탈권위 지수’와는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⁷⁾

5) 시기의 구분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972년의 유신체제나 1980년 신군부의 등장과 같은 정치적 사건, 또는 1973년 1차 오일쇼크 등과 같은 경제적 사건 역시 한국의 사회변동에서 중요한 사건들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건을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는 연구자의 주관적 관심사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다른 사건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그 사건을 전후하여 분석 시기를 구분한다 하더라도 왜 그 시기를 선택하였는가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최근의 사건이야말로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위기로 생각하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학자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다(김문조, 2008; 김호기, 2007; 박길성, 2003)

6) 통계청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의 구체적인 자료원(data source)은 다음과 같다.

- 실업률 : 고용·노동·임금 → 고용 → 경제활동인구조사 → 실업률
- 지니계수 : 물가·가계 → 가계 → 가계·소득지출 → 소득분배지표 → 지니계수
- 국내총소득 : 국민계정 → 주요지표 → 국내총생산

7) 통제변인으로 선정된 ‘국내총소득’의 경우 다른 독립변인과 상관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1인당 담당인구수와는 부적으로 높은 관계를 보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통제변인 중에는 ‘만 15세 이상 인구수’도 고려를 하였으나, 종속변인으로 선정된 범죄율에 이미 인구수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변인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국내총소득’까지 제외하면 중요한 통제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변인의 효과만을 살펴보게 된다. 그러므로 ‘국내총생산’이 전체 결과를 크게 왜곡시키지 않는다

<표 1 > 독립변인들 간의 단순상관 분석

	실업률	지니계수	탈권위 지수	경찰1인당 인구수
실업률	1.00			
지니계수	.454**	1.00		
탈권위 지수	-0.19	-.869**	1.00	
경찰1인당 인구수	.496**	.829**	-.749**	1.00

* p < 0.05, ** p < 0.01

가. 종속변인

종속변인으로는 1966년부터 2007년까지 42년 동안의 ‘인구십만명당 재산 범죄건수(율)’, ‘인구십만명당 강력 범죄건수(율)’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⁸⁾ 재산범죄에는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등이 포함되며, 강력범죄에는 살인, 강도, 강간(성폭력 포함), 방화가 포함된다. 이러한 범죄율 자료는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백서』와 『범죄분석』의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2) 분석방법

가. 시계열분석방법

시계열 데이터(time-series data)란 시간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발생한 관측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 연구의 사례에서와 같이 범죄추세 혹은 경기변동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시계열 분석(time-series analysis)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계열 회귀분석은 모형을 구축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변화를 다른 변인에 의해서 설명하고, 그 시계열 데이터를 그러한 변화에 관한 구조적 규칙과 관련시킬 때 사용한다(노형진, 2007: 14). 일반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면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8) ‘인구십만명당 전체 범죄건수(율)’도 종속변인으로 고려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전체 범죄에는 교통범죄를 비롯해 보건의범죄, 경제범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인구십만명당 전체 범죄건수(률)’을 종속변인에서 제외하였다.

분석하게 되면 잔차의 독립성 원칙을 위배하게 되어 이른바 ‘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기상관성이 높을수록 추정치는 실제값에 더 근사한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에 벗어남으로써 왜곡된 해석을 낳을 수 있다(Ostrom, 1978).

대부분의 시계열 자료는 추세를 가지고 있거나 변동이 불규칙하므로 정상성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시계열을 정상시계열로 바꾸어 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가령 선형추세를 갖는 시계열을 정상화과정으로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차분(differencing)으로 원 계열값들을 대치시킨 후 모형을 상정한다. 즉 시계열 z_t 가 ARMA(p, q) 모형을 갖는다면⁹⁾, 시계열 z_t 는 차수가 (p, d, q)인 자기회귀누적모형(ARI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model)¹⁰⁾을 갖게 된다(박유성·김기환, 2002; 이종협, 2007: 106). 이러한 자기상관성을 검증을 통해 제거한 후 각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이 시계열 회귀분석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되는 방법이 시계열 회귀분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분석을 위한 통계 패키지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나. 모형의 설정

Box와 Jenkins(1976)는 시계열 모형을 찾기 위한 3단계 절차를 제안하였다. 우선 시계열 자료의 정상성(stationary) 여부를 판단한 후 1단계에서는 식별(identification)을 통해 한 가지 이상의 ARIMA 모형을 선택한다. 2단계는 추정(estimation)으로 1단계에서 선택한 모형의 모

9) 자기회귀과정(autoregressive process)은 AR(p)과정이라고 하며, AR(1)의 경우 z_t 를 설명하기 위하여 z_{t-1} 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며, 이후 차수의 값들은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갖는다. 확률과정에는 변동량도 포함되는데, 이런 확률과정을 이동평균과정(moving average process)이라 하고 MA(q)과정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시계열 가 두 확률과정(AR(p), MA(q))에 의하여 따로따로 설명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두 확률과정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두 확률과정을 합친 혼합모형을 ARMA(p, q)과정이라고 표기한다(박유성·김기환, 2002: 72-85).

10) ARIMA 방법은 정상적인 자료 계열에만 적용한다. 정상적 계열의 평균이란 계열의 모든 수준에 대한 평균을 말한다(정동빈·원태연, 2001: 8).

수를 추정한다. 3단계는 모형진단(diagnosis of model)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다(Yaffee and McGee, 2000; 정동빈·원태연, 2001).

부적절한 모형이라고 판정되면 실제값에 근거하여 추정된 자기상관 함수와 편자기상관함수를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패턴이 '0'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패턴인지 절단되는 형태인지를 판단하여, 자기회귀모형 또는 이동평균모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정동빈·원태연, 2001; 이종협, 2007).

이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사용한 시계열 자료 가운데 '인구십만명당 재산범죄율'은 분석 결과 정상시계열로 판단되었다. 반면, '인구십만명당 강력범죄율'은 분석 결과 비정상시계열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인구십만명당 강력범죄율'은 차분을 적용하여 정상시계열로 변환을 하였고, 모형진단의 절차에 따라 각각의 시계열 모형에 대해 이동평균 모형도 동시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모형의 검증에는 Box와 Ljung 통계량을 사용하였다.¹¹⁾

4. 분석 결과 및 해석

1) 범죄율의 추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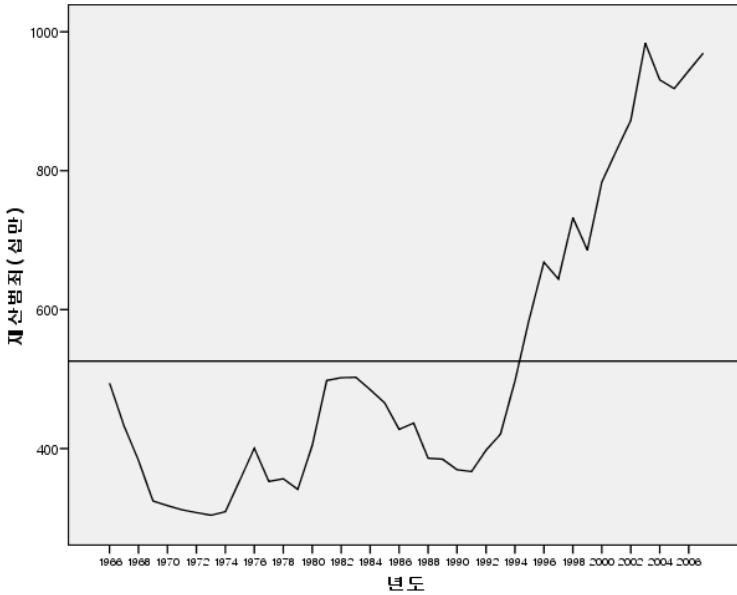
본격적인 시계열 회귀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전체 범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범죄율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그림 2>는 '인구십만명당 재산범죄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1) Box와 Ljung은 모형의 검증과 관련하여 한 집합으로 여기는 모든 잔차 자기상관함수를 근거로 한 검증통계량을 제시하였다. 즉 k개의 잔차 자기상관계수가 주어진 경우 백색잡음들 사이의 상관관계수가 모두 '0'이라는 영가설 하에서

$$Q^* = n(n+2) \sum_{k=1}^K \frac{r_k^2(\hat{\epsilon})}{n-k}$$

를 검증한다. Q^* 는 $\chi^2(k-m)$ 분포를 따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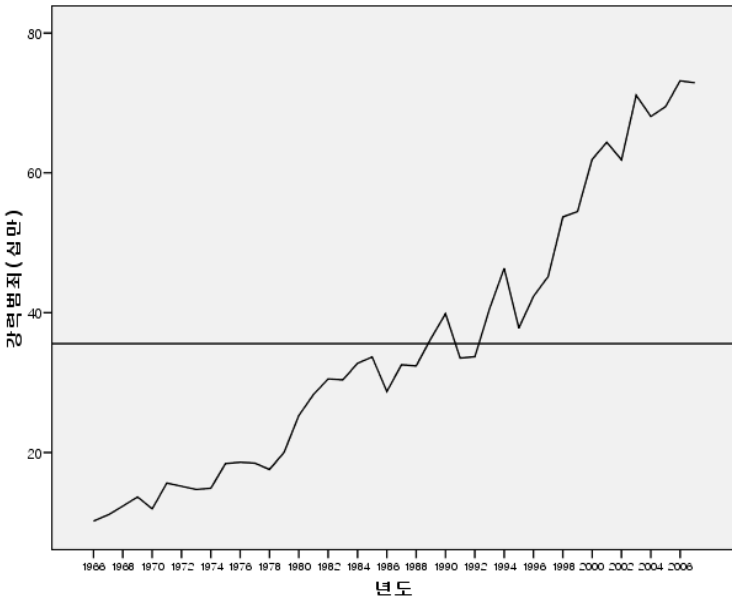
m 은 ARIMA 모형을 추정할 모수로 Q^* 가 충분히 크면 한 집합으로써 잔차 자기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0'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추정된 모형의 백색잡음들이 서로 상관되므로 다른 모형을 고려해야 한다(정동빈·원태연, 2001: 67).



<그림 2> 인구십만명당 재산범죄율 추세(1966-2007)

재산범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과 1981년 사이에 높은 증가세를 보이더니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재산범죄율의 감소 추세는 1992년까지 이어지다가 1993년 이후 다시 급격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율기가 다시 한 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재산 범죄가 최근 들어 보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3>을 통해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과 같은 강력범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6년 이후 최근까지 선형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강력범죄율의 변화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2년과 1994년, 그리고 1997년과 2001년 사이의 증가세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문민정부(김영삼 정권)의 출범 및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림 3> 인구십만명당 강력범죄율 추세(1966-2007)

이러한 추세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재산범죄율과 강력범죄율 모두 일시적으로 상승한 적은 있으나, 대체로 1980년대 후반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추세를 나타내다가 1990년대 초반부터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서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출한 변인들이 이러한 범죄율의 변화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아울러 시기적으로 볼 때 1980년대 후반의 중요한 사건이었던 1987년 민주화와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가 이전의 범죄율과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통계적 검증을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시계열 분석 결과

다음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구십만명당 재산범죄율'에 대한 시계열 분석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모델 1은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국내총소득'만 투입한 결과

이다. 그리고 모델 2는 '실업률'과 '지니계수' 등 경제관련 요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를 보여주며, 모델 3은 '탈권위 지수' 및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로 측정된 범죄통제 변인을 추가한 결과이다. 모델 4는 시기 변인까지 포함하여 모든 변인을 투입한 모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 재산범죄율의 시계열분석 결과 1966-2007, ARMA(1, 4) Model

투입변인(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통제변인	국내총소득	1.03** (2.81)	2.12** (14.56)	2.41** (10.98)	3.39** (8.63)
	경제요인		0.07** (4.31)	0.04** (3.25)	0.09** (4.04)
	지니계수		0.03** (3.89)	0.05** (4.68)	0.05** (5.85)
범죄통제	탈권위 지수			0.01 (2.15)	0.02** (3.40)
	경찰 1인당 인구수			0.01 (2.20)	0.02* (2.70)
시기변인	1987-1997 ^b				-0.11 (-1.07)
	1998-2007				-0.45** (-3.06)
	Ljung-Box Q(18)	7.61 ^a	6.41 ^a	16.68 ^a	15.05 ^a
	df	13	13	13	13
	Stationary R ²	0.94	0.95	0.96	0.97

* p < 0.05, ** p < 0.01 ()안의 수치는 t값을 의미함.

a. p <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b. 기준년도: 1966~1986년 사이의 기간.

먼저 통제변인만 투입한 모델 1에서는 '국내총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델 2에 투입된 경제관련 요인들 역시 $\alpha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에서는 범죄통제 요인으로 투입된 '탈권위지수'와 '경찰1인당 담당인구수'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모델 4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모델 4에 투입된 시기변인의 경우 '1987년부터

1997년 시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1998년부터 2007년 시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델 4를 중심으로 투입된 변인들의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총소득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재산범죄율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가의 경제적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범죄율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실업률과 지니계수의 증가는 재산범죄율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업률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재산범죄가 늘어난다고 하는 선행연구들의 주장(Yoon and Joo, 1995)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소득집중도(소득불평등)가 심화되는 시기에도 재산범죄는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범죄통제 요인 역시 재산범죄율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권의 성격이 덜 독재적이고 보다 민주적일수록 재산범죄율 역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경찰 1인이 담당해야 할 치안수준의 부담이 클수록 재산범죄율 역시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시기의 효과는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해 주고 있다. 즉 '1966년부터 1986년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1987년부터 1997년 시기'는 재산범죄율의 변화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반면, '1998년부터 2007년 시기'는 오히려 그 이전보다 재산범죄율의 변화가 낮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달리 말하면, 재산범죄율의 추세로만 보면 전반적으로 범죄율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적적 시계열 효과 및 다른 변인들을 통제했을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산범죄율의 변화는 오히려 과거에 비해 상승정도가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 및 경기악화의 효과가 장기적·단기적으로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연구(Cohen and Felson, 1979)와도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표 3>은 '인구십만명당 강력범죄율'에 대한 시계열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통제변인만 투입한 모델 1에서는 '국내총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산범죄율의 분

석 결과와 일치한다. 모델 2에 투입된 경제관련 요인들 중에는 '실업률'만 $\alpha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을 뿐 '지니계수'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모델 3에서는 '탈권위지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경찰1인당 담당인구수'는 $\alpha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모델 4에서 '경찰1인당 담당인구수'는 통계적 유의미성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델 4에 투입된 시기변인의 경우에는 '1987년부터 1997년 시기'와 '1998년부터 2007년 시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결국 모델 4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투입된 대부분의 변인들의 효과는 사라졌고, 실업률만 강력범죄율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실업률이 증가한 시기일수록 강력범죄율 역시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이 주로 재산범죄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적 상황의 악화가 폭력적 범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율의 결과를 재산범죄율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재산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던 여러 변인들의 효과가 강력범죄율에 대한 분석에서는 대부분 사라진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것을 달리 해석해 보면, 사회변동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정치·경제적 요인들은 주로 재산범죄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강력범죄는 주로 사적인 감정, 분노, 상황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되기 때문에 재산범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거시적 사회변동과의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다. 물론 이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강력범죄율 역시 실업률과 일정부분 상관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강력범죄율은 재산범죄율에 비해 사회변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거시적 측면에서 범죄율의 변화를 설명할 때 범죄발생의 원인을 범죄유형별로 구분지어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표 3> 강력범죄율의 시계열분석 결과 1966-2007, ARIMA(1, 1, 2) Model

투입변인(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통제변인	국내총소득	2.28** (4.08)	3.08 (1.82)	-0.18 (-0.08)	-0.26 (-0.03)
경제요인	실업률		0.91** (4.31)	1.36** (3.74)	1.54* (2.51)
	지니계수		-0.06 (-0.69)	-0.01 (-0.01)	0.16 (0.89)
범죄통제	탈권위 지수			-0.07 (-0.91)	-0.10 (-0.97)
	경찰 1인당 인구수			-0.01** (-3.20)	-0.03 (-0.26)
시기변인	1987-1997 ^b				4.36 (1.85)
	1998-2007				4.06 (1.25)
Ljung-Box Q(18)		16.16 ^a	8.97 ^a	13.66 ^a	15.30 ^a
df		15	15	15	15
Stationary R ²		0.26	0.37	0.56	0.53

* p < 0.05, ** p < 0.01

()안의 수치는 t값을 의미함.

- a. p <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b. 기준년도: 1966~1986년 사이의 기간.

5. 결론

뒤르켐(Durkheim, 1973)은 처벌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논의에서 국가의 권력이 보다 중앙집권화 될수록 처벌은 더욱 엄격해질 뿐만 아니라 보다 엄중한 범죄통제를 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이러한 범죄통제의 시각에서 보면 범죄율은 국가권력의 성격과 정치적 변화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머튼은 사회가 개인을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상태에서 아노미가 발생한다는 뒤르켐의 논의를 발전시켜 범죄학적 아노미 이론을 제시하였다. 비록 머튼이 문화적 목표와

합법적 수단 간의 괴리를 아노미라고 정의하였지만, 이후 학자들은 이러한 개념을 주로 미시적인 입장에서 개인의 범죄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적용하였다. 그러나 머튼은 아노미 현상이 반드시 개인 수준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거시적 과정을 수반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신동준, 2004). 따라서 거시적 맥락에서 아노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즉 경제적 불황기 혹은 경제적 불평등이 범죄를 유발하는가에 대한 논의 역시 꾸준히 있어 왔다. 경제적 불평등과 실업과 연관된 이전의 연구들은 많은 경우 경제적 불평등과 실업을 일종의 범죄 동기 혹은 범죄 기회 등의 기제로 이해한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실업이 범죄에 미치는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를 구분지어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이처럼 범죄율의 변화가 사회적 변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시작되었다. 논자에 따라 여러 시기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1987년의 민주화와 1997년 외환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1980년 이후 한국사회의 중요한 변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범죄학에서 주장하는 범죄통제 및 경제관련 요인들과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변동을 연결 지어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관련 변인들과 사회적 변화 등이 범죄발생현상에 대해서 조건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대상을 재산범죄와 강력범죄 등 범죄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출된 관련 변인들을 조작화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첫째로 변인들과 유형별 범죄발생의 관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재산범죄의 경우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국가권력이 보다 민주적이고 덜 독재적일수록, 그리고 실업률, 사회불평등,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증가할수록 재산범죄율은 증가하였다. 반면에,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오직 실업률만이 강력범죄율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논의에서 주장하는 미와 같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재산범죄는 증가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반해서, 강력범죄의 경우는 오직 실업률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파울스와 머바(Fowles and Merva, 1996)의 논의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경제적 불평등을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인지는 분노로 이어지고 이러한 분노는 또한 폭력적인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실업률이 장기적 측면에서 강력범죄율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의 연구에도 일부 함의를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둘째로 재산범죄율과 강력범죄율의 변화 양상을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변동 중에서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시점의 효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1987년과 1997년이라는 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범죄율과 강력범죄율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오직 1997년 이후의 시기에서만 재산범죄율이 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이 범죄에 미치는 효과가 단기적 감소효과와 장기적 증가효과로 나타난다는 코헨과 펠슨(Cohen and Felson, 1979)의 주장처럼 이 연구에서도 대량 실업으로 대변되는 1997년의 외환위기는 이후 재산범죄율의 변화에 부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설명할 때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반면, 사회변동의 거시적 요인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범죄율 추세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사회변동의 요인들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도 범죄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거시적 사회변동과 범죄현상이 특정한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기 보다는 누적적이고 산재해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러한 사회구조적 요인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도 범죄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 참고 문헌 ■

- 구도완. 1996.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문학과 지성사.
- 김문조. 2008. 『한국사회의 양극화: '97년 외환위기와 사회 불평등』. 서울: 집문당.
- 김준호. 1986. “범죄사회학 이론의 흐름”. 『형사정책』. 제1호: 95-121.
- 김호기. 2007. “6월 민주항쟁 20년,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과 과제: 87년 체제, 민주주의, 대통령 선거”. 세미나 자료.
- 노형진. 2007. 『SPSS/Excel에 의한 재미있는 시계열 분석』. 서울: 효산.
- 박길성. 2003. 『한국사회의 재구조화: 강요된 조정, 갈등적 조율』.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길성. 2007. “한국사회의 갈등 구조와 통합”. 『한국사회학회 특별 심포지엄』. 113-132.
- 박상훈. 2006. “한국의 '87년 체제' : 민주화 이후 한국정당체제의 구조와 변화”. 『아세아연구』. 통권 124호.
- 박유성·김기환. 2002. 『SAS/ETS를 이용한 시계열자료분석 I』. 파주: 자유아카데미.
- 신동준. 2004. “살인과 자살의 문화적 사회구조적 원인: 머튼의 아노미 이론 검증을 위한 국가 간 비교 연구”. 『한국사회학』. 38(4): 33-71.
- 유홍준. 2000. “경제위기가 직업세계 및 일상적 생활의 사회적 관계에 미친 영향”. 『비교사회』. 통권 제3호: 164-205.
- 윤상철. 2005. “87년 체제의 정치지형과 과제”. 『창작과 비평 통권』. 130호.
- 윤옥경. 2007. “범죄통제의 사회적 맥락: 경제위기, 정치적 상황과 징역선고율의 변화”. 『형사정책연구』. 18(1): 311-350.
- 윤정구·석현호·이재혁. 2004. “한국사회 무질서의 사회심리적 메커니즘 연구”. 『한국사회학』. 38(2): 63-99.

- 이중협. 2007. 『시계열분석과 응용』. 파주: 자유아카데미.
- 임희섭. 1997. “현대 한국인의 가치관: 삶의 목표가치과 규범가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30: 143-162.
- 정동빈·원태연. 2001. 『시계열자료와 단순화 분석 series 1』. 서울: SPSS아카데미.
- 정운찬. 2008.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대엽. 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 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서울: 아르케.
- 채만수. 2007. “6월 항쟁과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자계급”. 『정세와 노동』. 제26호
- 최인섭. 2002. 『범죄발생 추세분석: 1964-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에이커스(Akers, Ronald L.) 2004.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4th ed.). 민수홍 외 공역. 2005. 『범죄학 이론』. 서울: 나남출판.
- Barberet, Rosemary Louise. 1994. *Modernization, Criminal Sanctions and Crime in Spain*.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 Box, George E. P. & Gwilym M. Jenkins. 1976. *Time Series Analysis Forecasting and Control*. Oakland, CA: Holden Day.
- Cantor, D. & K. C. Land. 1985. “Unemployment and Crime Rates in The Post-world War II United State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 317-332.
- Cohen, Lawrence E. & Marcus Felson.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ies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8.
- Cullen, Francis T. & Robert Agnew. 1999. *Criminological Theory : Past to Present*. Los Angeles, California: Roxbury Pub. Co.

- Devine, J. A., J. F. Sheley, & M. D. Smith. 1988. "Macroeconomic and Social-Control Policy Influences on Crime Rate Changes, 1948-1985".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407-420.
- Durkheim, E. 1973. "Two Laws of Penal Evolution". *Economy and Society*. 2(3): 285-308.
- Fowles, R. & M. Merva. 1996. "Wage Inequality and Criminal Activity: An Extreme Bounds Analysis For The United States". *Criminology*. 34(2): 163-182.
- Hilbert, R. A. 1986. "Anomie and the moral regulation of reality: The Durkheimian Tradition in Modern Relief". *Sociological Theory*. 4: 1-19.
- Jacobs, David. & Ronald E. Helms. 1996. "Toward a political model of incarceration: A time-series examination of multiple explanation for prison admission r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2(2): 323-57.
- Merton, Robert K.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 672-682.
- Messner, S. F. 1982. "Poverty, Inequality, and the Urban Homicide Rate". *Criminology* 20(1): 103-114.
- Nisbet, Robert A. 1965. *Emile Durkheim*.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 Ostrom, Charles W. 1978. *Time Series Analysis: Regression Techniques*. Sage publications.
- Sheingold, Stuart A. 1995. "Politics, public policy, and street crim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155-68.
- Vold, Georg B., Thomas J. Bernard, & Jeffrey B. Snipes. 2002. *Theoretical Criminology*(5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illiams, K. R. 1984. "Economic Sources of Homicide: Reestimating

The Effects of Poverty and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283-289.

Yaffee, Robert A. & Monnie McGee. 2000. *Introduction to Time Series Analysis Forecasting with Applications of SAS and SPSS*. CA: Academic Press.

Okkyung, Yoon. & Heejong, Joo. 2005. "A contextual analysis of crime rates: The Korean case". *Crime, Law and Social Change*. 43: 31-55.

박성훈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코리아리서치센터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실무를 경험한 바 있고, 현재는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일탈/범죄사회학, 통계/조사방법론 등이며, 최근 연구로 『청소년비행에 있어 낙인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비공식 낙인을 중심으로』 (공저, 2009)가 있다.

장안식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범죄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storative Practice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중에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회복적 사법, 청소년 비행, 양적방법론 등이며, 최근 연구로 『복잡계와 네트워크 사회의 변화』 (공저, 2008)가 있다.

이재경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법사회학, 정치사회학이다.

[2008. 12. 31. 접수; 2009. 5. 27. 채택]